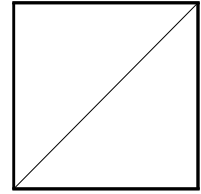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41 호
의 결 연 월 일	2021. 1. 27. (제 2 차)

의  
결  
사  
항

(주)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 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연월일	2021. 1. 27.

## 1. 의결주문

(주)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## 2. 제안이유

(주)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·부당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마련 등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(주)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<붙임1>

-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), 제28조(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), 제43조(과태료) 제2항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금융감독원 제31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12.15.) 심의필

## <별지>

(주)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# 1. 조치내용

#### ☐ 기관에 대한 조치

- (주)케이비국민카드 : 과태료 1,200만원 부과

### 2. 조치사유

#### 가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

- ☐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데도,

- (주)케이비국민카드는 2017.1.1.부터 검사종료일(2019.10.11.)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 성과평가지표\*에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(Total Shareholders Return)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

\* KPI(80%), 상대적 총주주수익률(20%)

#### < 관련법규 >

##### 1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제28조

## 관 계 법 규

### 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

**제26조(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)**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)**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,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준법감시인"은 "위험관리책임자"로 본다.

**제35조(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)**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(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,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(생략)
2.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⑥ 금융위원회(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)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·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40조(권한의 위탁)**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43조(과태료)**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6. 제25조제6항(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[별표]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(제34조 및 제35조 관련)

1.~26. (생략)

27. 제2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(제2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임면 및 보수지급과 평가기준 운영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28.~41. (생략)

#### 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**제30조(업무의 위탁)**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

1.~9. (생략)

11. 법 제35조제1항제3호(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)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

11의2.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[법 제35조제1항제3호(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)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]

12.~16. (생략)

**제3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## 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(제34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#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모. 법 제25조제6항(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2항제6호	3,000

## □ 「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

**제18조(임원에 대한 제재)** ① 금융위설치법,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5. 주의

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·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

**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**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과징금 부과기준 및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**제23조(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)**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·부당행위의 정도, 고의·중과실 여부, 사후 수습 노력, 공적, 자진신고,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

#### 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위반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- 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- 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- 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- 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<붙임 2>

## 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(주)케이비국민카드

2. 제재조치일 : 2021. . . 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 재 내 용
기관	과태료 1,200만원 부과
직원	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통보 1명, 주의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(1)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

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데도,

- (주)케이비국민카드는 2017.1.1.부터 검사종료일(2019.10.11.)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 성과평가지표\*에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상대적 총주주수익률(Total Shareholders Return)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

\* KPI(80%), 상대적 총주주수익률(20%)

### < 관련법규 >

1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제28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정책과	여신금융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833	02-3145-8801